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 심포지엄]

# 금융정책의 평가와 전망: 전문가 서베이를 중심으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2022년 5월

# 목 차

---

1.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
2.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안 과제
3. 금융 감독 관련 정책 이슈
4. 향후 정책 방향

# 경쟁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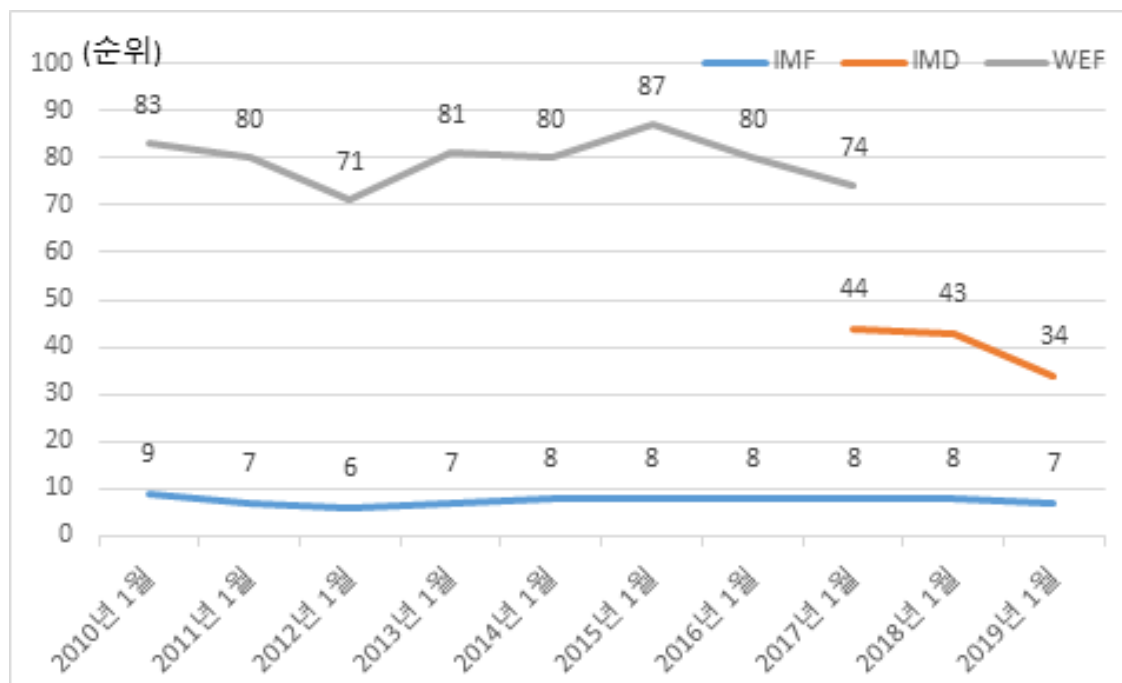
---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에 대한 상반된 견해

- 국내 금융산업은 1990년대 자율화 정책 이후,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역량이 크게 향상
  -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의 금융패러다임으로 전환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화유동성 위기 등으로부터의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혁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계기
- 그러나 한편에서는 글로벌 금융 대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주체들도 국내 금융산업을 여전히 미성숙된 불안정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
  -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평균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1.3%인 반면 금융산업은 0.3% (통계청 시산)

# 경쟁력 수준

-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해당 산업 역량에 대한 국제지표들의 엇갈린 평가에도 반영



주) 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 (192개국 중)

IMD: Business Efficiency Index (64개국 중)

WE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dex (144개국 중)

# 경쟁력 수준 평가

---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서베이 문항 1

[문]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 ②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③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점차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 ④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점점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 경쟁력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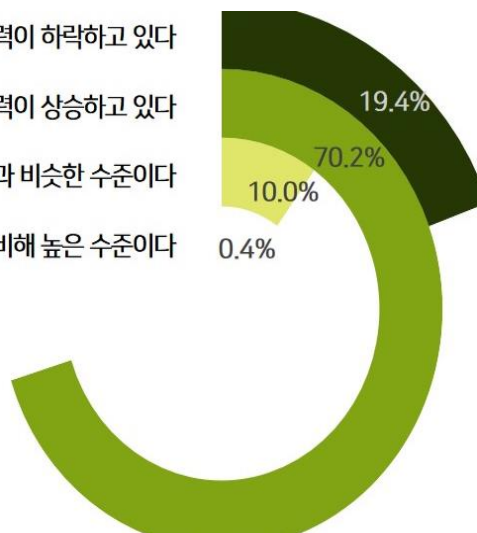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서베이 문항 1: 결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점점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점차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응답자의 89.6%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
-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그룹별 응답 특성
  - 기업인들이 타 그룹에 비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타 그룹에 비해 높음

# 경쟁력 수준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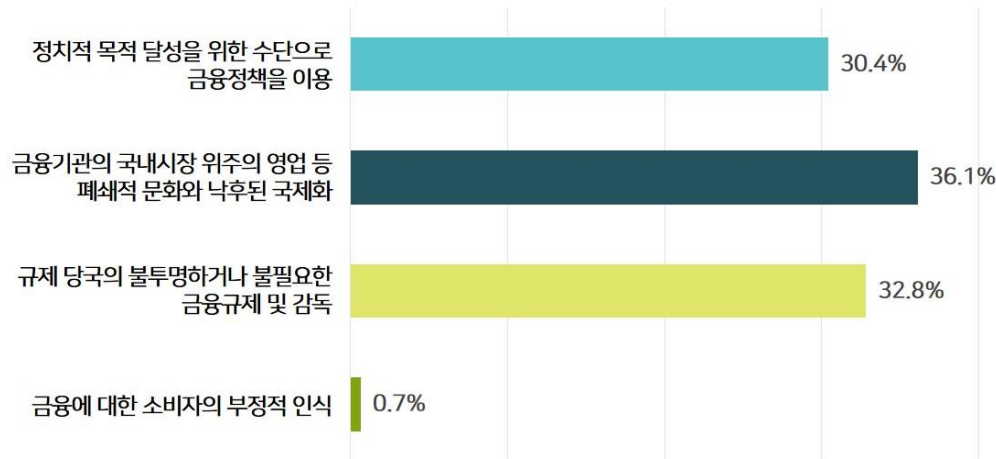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서베이 문항 2

[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면, 이러한 상황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이용
- ②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 등 폐쇄적 문화와 낙후된 국제화
- ③ 규제 당국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및 감독
- ④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 경쟁력 수준 평가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서베이 문항 2: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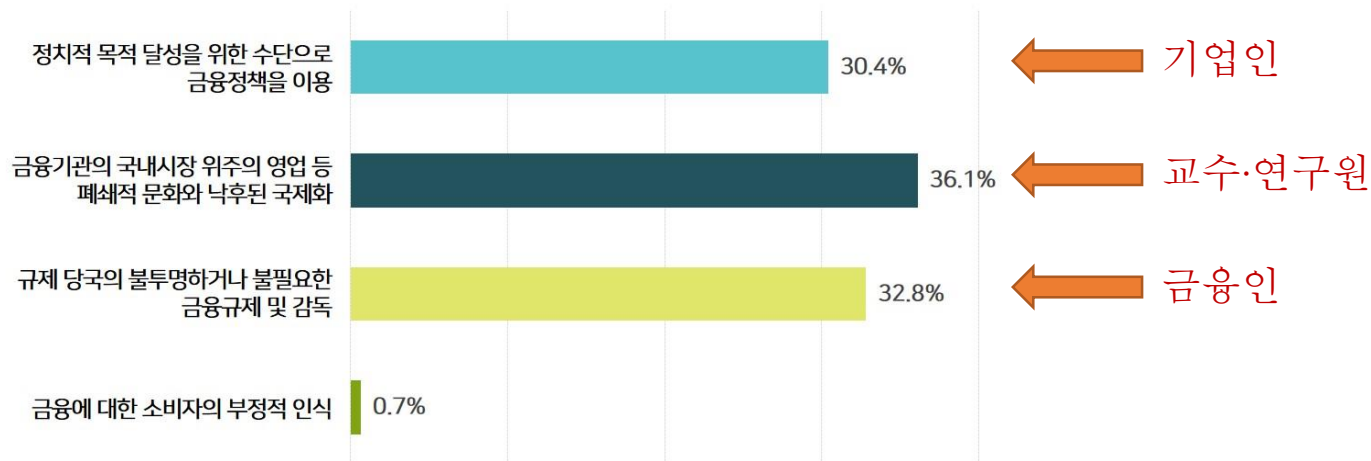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산업은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혁신 및 도전의식보다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쇄성과 대외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경쟁력 수준 평가

## ■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서베이 문항 2: 결과



○ 국내 금융산업은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혁신 및 도전의식보다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쇄성과 대외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그룹별 응답이 상이

# 현안 과제

---

## ■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주목적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방역 목적의 봉쇄,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등으로부터 발생),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
  - 이와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은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됨
  -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 금리인하를 통한 조달비용의 축소 및 채무유예나 대출확대 등 유동성 지원 등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포괄하여 기업과 가계 및 개인의 재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

# 현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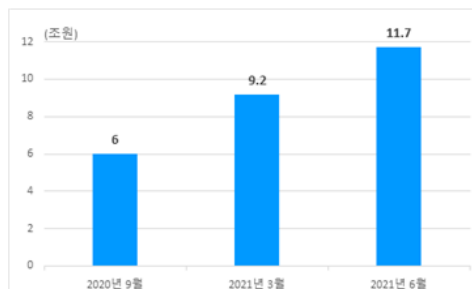
## ■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아래 그림에는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 가운데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황 유예조치 규모가 제시되어 있음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이자상환 유예]



자료: 금융위원회

# 현안 과제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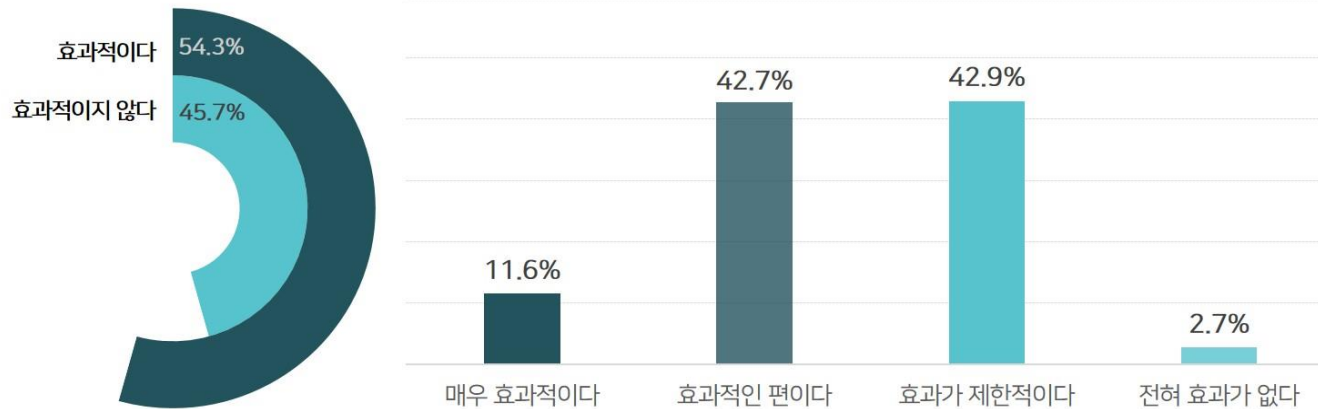
## ■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서베이 문항

[문]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유예나 대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한 금융정책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이다
- ② 효과적인 편이다
- ③ 효과가 제한적이다
- ④ 전혀 효과가 없다

# 현안 과제 평가

## ■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54.3%(‘매우 효과적이다’ 11.6% + ‘효과적인 편이다’ 42.7%)로 분석

○ 그러나 반대 의견도 높은 비중

•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이다’는 의견도 45.7%(‘전혀 효과가 없다’ 2.7% + ‘효과가 제한적이다’ 42.9%)나 되었다는 점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제전문가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

# 현안 과제

---

## ■ 가계 및 국가 부채

- 글로벌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 누적되는 결과
-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유사
  - 명목 GDP 대비 총부채(정부부채 + 민간부채) 비중은 2021년 3분기 기준 266.3%로 해당 시점 선진국 평균인 291.8%보다는 낮고, 신흥국 226.9%에 비해서는 높지만 글로벌 평균 수준인 265.9%와는 비슷한 수준
  - 그러나 경제주체별 부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기업부채 증가속도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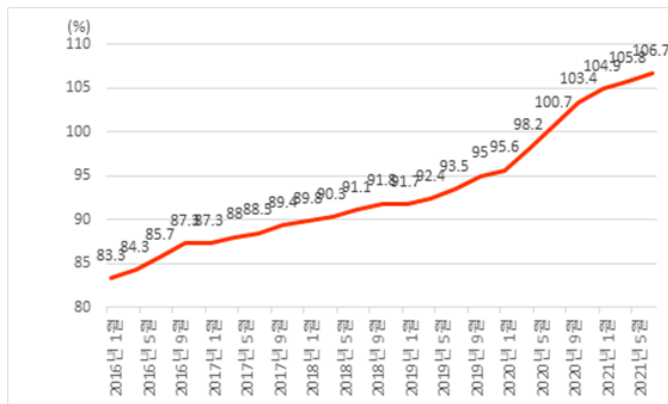
# 현안 과제

## ■ 가계 및 국가 부채

### ○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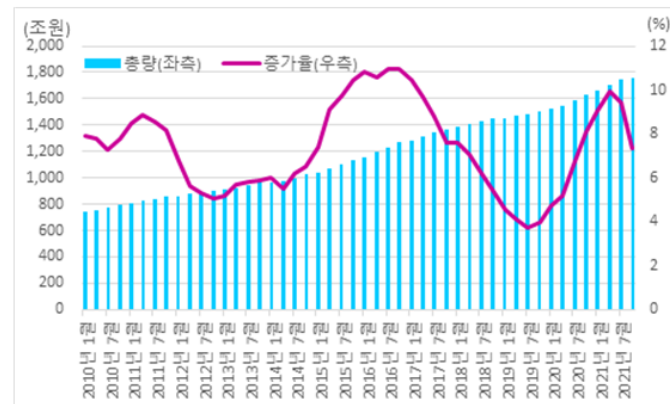
- 2016년 초 83.3%였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위기 발생 직후인 2020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도 2021년 초반 전년동기대비 기준 10%를 상회하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자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가계대출 총량 및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현안 과제

## ■ 가계 및 국가 부채

###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규제 수단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LTV는 2002년에 DTI는 2005년에 각각 도입한 이후 지역별·담보대출기관 유형별로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하면서 시행

[2017년 5월 이후 LTV·DTI 관련  
주요 규제강화 사례]

일시	규제강화 내용
2017년 6월	LTV 70 → 60%로 하향조정 DTI 60 → 50%로 하향조정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세종 과천 등)를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 및 DTI를 40% 이내로 축소
2018년 9월	<LTV> 2주택 이상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의 LTV 비율을 40% 이내로 강화
2019년 12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시가로 지정하며, 주택가격에 따라 LTV 대출 구간이 달라지고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3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주택가격에 따라 LTV 대출 구간이 달라지고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50%,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0% 적용
2020년 7월 이후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 현안 과제

---

## ■ 가계 및 국가 부채

###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DSR은 전년대비 0.6% 증가하여 BIS 기준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과 DSR 변화 양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판단

# 현안 과제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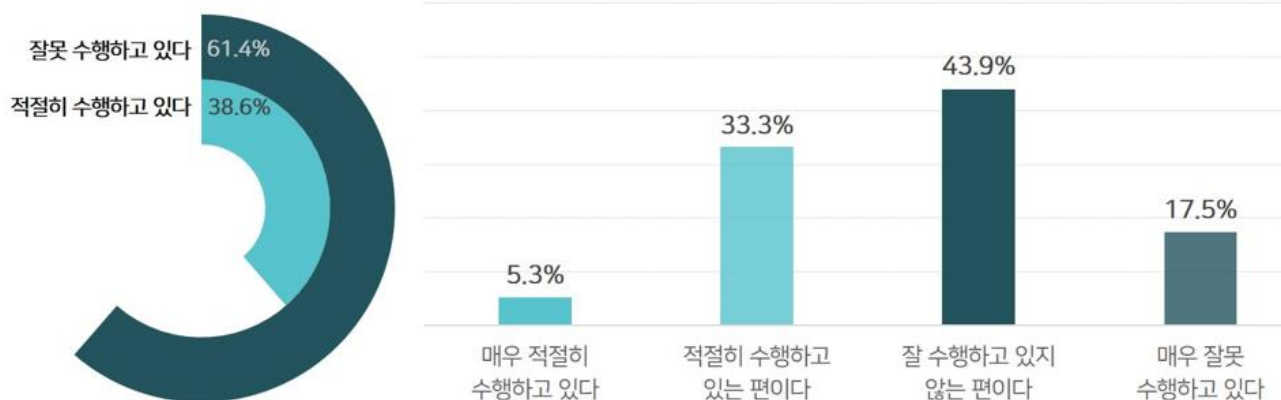
## ■ LTV·DTI·DSR 규제 관련 서베이 문항

[문]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은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수단으로 **DTI, LTV, DSR**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운영이 실수요자의 대출수요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 ②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 ③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④ 매우 잘못 수행하고 있다

# 현안 과제 평가

## ■ LTV·DTI·DSR 규제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 응답자의 부정적 평가가 우세

- 경제전문가의 61.4%(‘매우 잘못 수행하고 있다’ 17.5% +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43.9%)는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적 답변은 38.6%(‘매우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5.3%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33.3%)로 판명

### ○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 금융정책 당국이 이전과는 다른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 국내 가계부채의 GDP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대 수준인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 보이는 점 등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 현안 과제

---

## ■ 긴축적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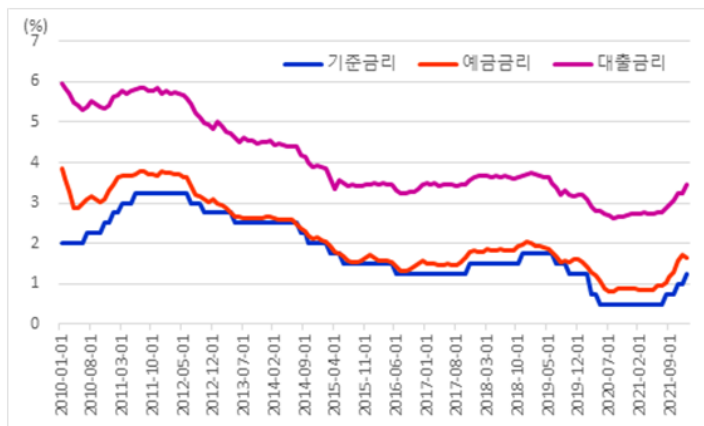
- 2022년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한 물가상승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 미국의 경우 공급병목, 임금상승, 빠른 수요회복 등으로 인해 2022년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8%를 상회하여 19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미국 연준은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전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현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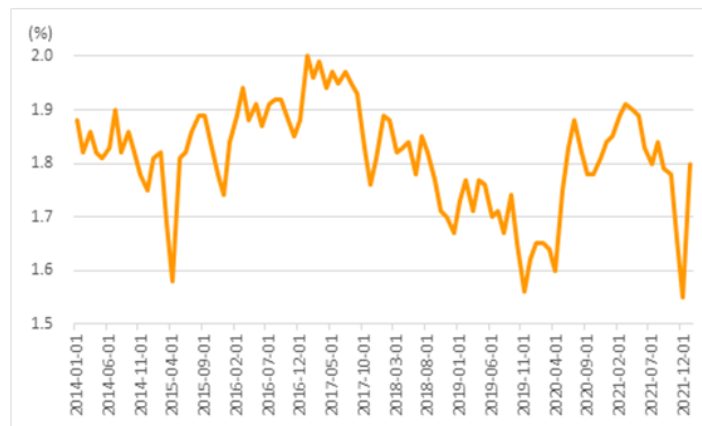
## ■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과정에서의 예대금리 마진 확대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효과
- 예대마진 개선과 대출 자산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들 실적은 고공행진 중인 반면,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까지 커지면서 예금자와 대출자 모두의 불만 증가

[기준금리,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자료: 한국은행

# 현안 과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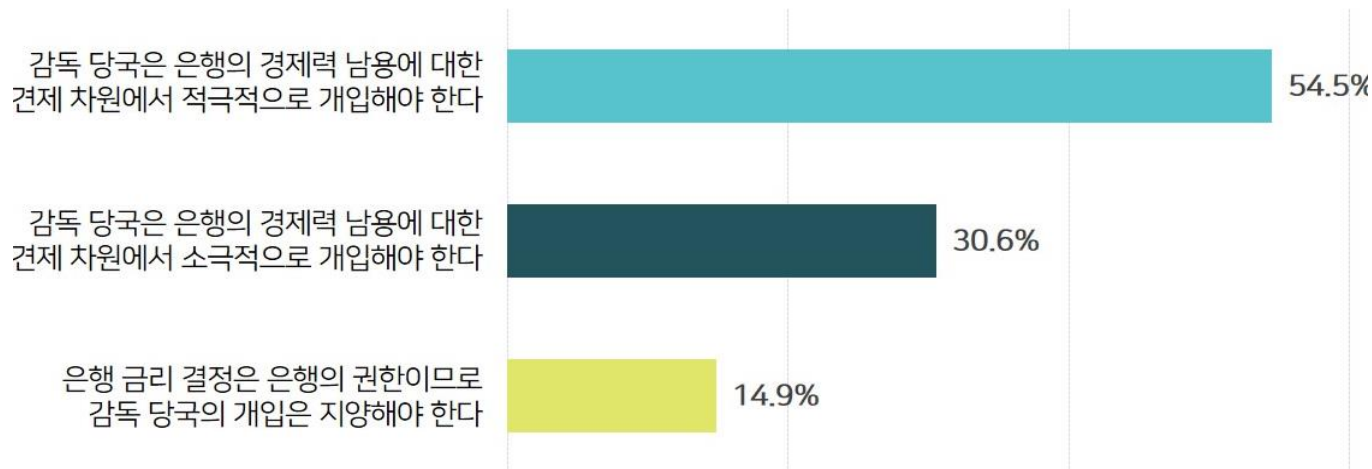
## ■ 예대금리 마진 확대 관련 서베이 문항

[문] 지난 연말 금리 상승을 계기로 기준금리도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늦게 올리고 대출금리만 먼저 올려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독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감독 당국은 은행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② 감독 당국은 은행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③ 은행 금리 결정은 은행의 권한이므로 감독 당국의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 현안 과제 평가

## ■ 예대금리 마진 확대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85.1%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은행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그룹별 응답 특성
  - 기업인의 대부분은 ‘감독 당국은 은행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았다는 특징

# 금융감독 정책

---

## ■ 금융감독 정책 및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 역사

-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산업 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과 함께 정부 금융정책의 주요한 한 축을 차지
- 금융감독은 기관별(institutional) 접근과 기능별(functional) 접근으로 구분
  - 기관별 접근은 감독의 초점이 금융업무나 금융상품·서비스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자체, 즉 금융회사의 형태에 맞춰지는 것을 의미
  - 기능별 접근은 감독의 초점이 금융회사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무 및 금융상품·서비스에 맞춰지는 것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서로 다른 업종 간 업무제휴 등을 통해 겸영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관측
  -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의 기능별 접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나,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업권별로 분산된 이원적 금융감독체계를 형성·유지해 왔으며, 이는 기관별 접근법이 의거한 것으로서 금융겸업화 및 금융혁신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와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발생 등의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



# 금융감독 정책

---

## ■ 금융감독 정책 및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 역사

- 이와 같은 기관별 접근법의 한계는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기구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으로 감독제도를 개편하게 만든 배경
  - 199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발족하여 금융감독과 관련된 정책 및 금융회사 인·허가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 그리고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검사·감독 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
-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맡는 이원적 금융감독체제로 재편
  - 2008년 2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단계 구조로 축소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제고

# 금융감독 정책

---

## ■ 금융감독 정책 관련 이슈

- 최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의 기능적 세분화, 금융플랫폼 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확대 및 기술력을 갖춘 Bigtech 들의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 증가 등으로 인해 규제당국의 유연하고 효율적 규제 및 감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규제·금융감독 정책의 설계 주체와 집행 주체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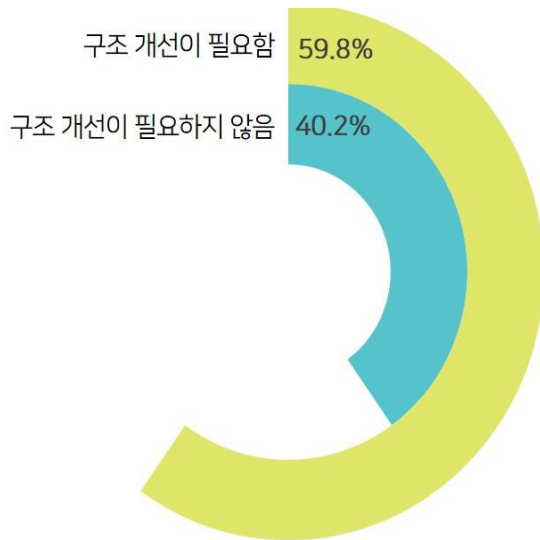
## ■ 금융감독 체계 관련 서베이 문항 1

[문]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맡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현 상태 유지)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 금융감독 체계 관련 서베이 문항 1: 결과



### ○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우세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구조 개선에 대해 59.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현 상태 유지)’는 답변은 40.2%에 그침으로써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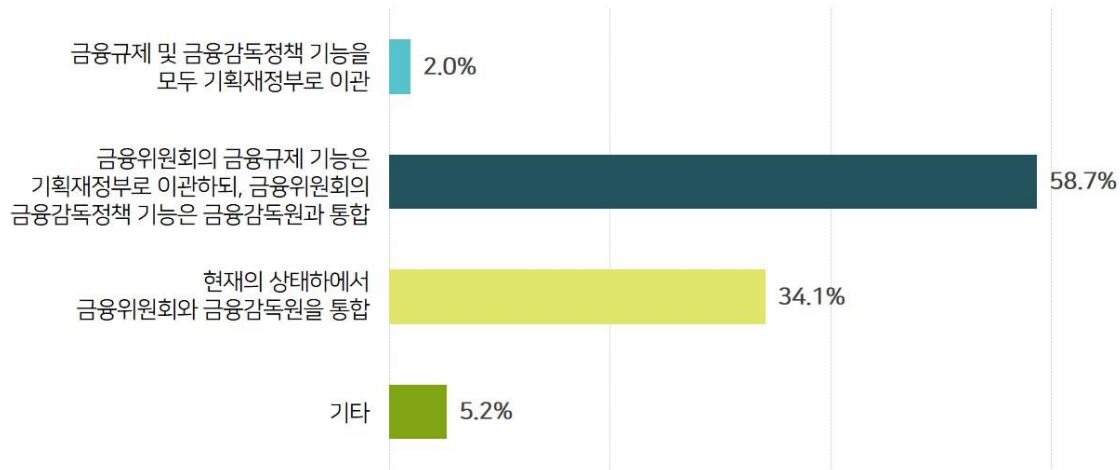
## ■ 금융감독 체계 관련 서베이 문항 2

[문] 금융감독체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 ②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다
- ③ 현재의 상태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한다
- ④ 기타

# 금융감독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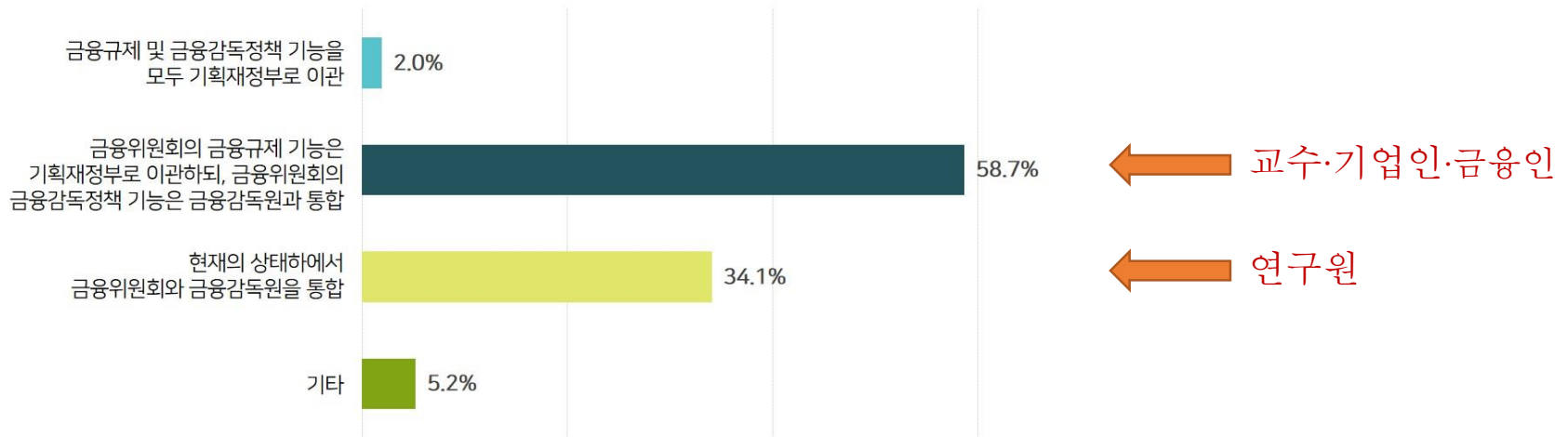
## ■ 금융감독 체계 관련 서베이 문항 2: 결과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다’(58.7%)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다음으로 ‘현재의 상태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한다’가 34.1%로 나타났고,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25.0%)는 응답은 2.0%에 그침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 금융감독 체계 관련 서베이 문항 2: 결과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다’(58.7%)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다음으로 ‘현재의 상태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한다’가 34.1%로 나타났고,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25.0%)는 응답은 2.0%에 그침
-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그룹별 응답이 상이

# 금융감독 정책

---

## ■ 금융감독 정책 관련 이슈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2년 1월 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검사시 기준에 실시해 오던 종합검사 폐지를 발표
  - 종합검사는 한 회사당 3~5년 주기로 금융감독원이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낱낱이 살피기 위해 시행한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 20명 정도가 최소 2~3주 금융사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 이는 1999년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검사방식이나,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의 실효성이 낮으며 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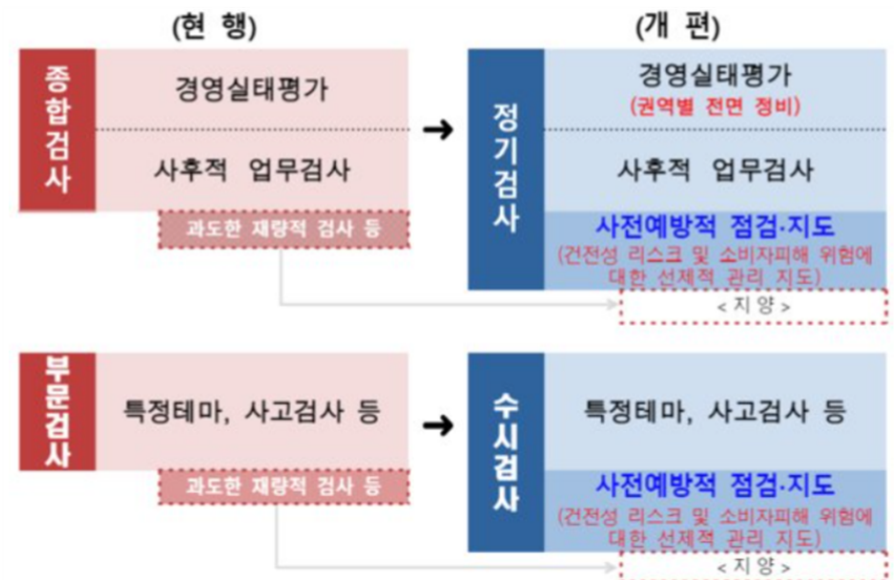


# 금융감독 정책

## ■ 금융감독 정책 관련 이슈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2년 1월 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검사시 기준에 실시해 오던 종합검사 폐지를 발표
-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종합검사 폐지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대체

[2022년 1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체계 개편안]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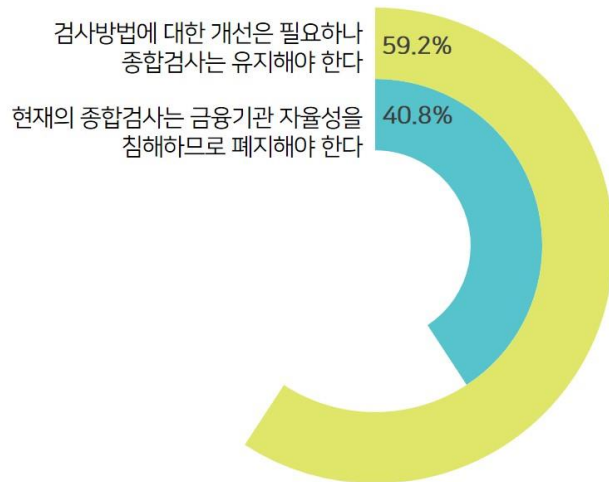
## ■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관련 서베이 문항

[문]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검사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의 종합검사는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 ② 검사방법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나 종합검사는 유지해야 한다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 종합검사 유지에 대한 의견이 우세

- 경제전문가의 과반인 59.2%가 ‘검사방법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나 종합검사는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의 종합검사는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8%로 나타남

### ○ 응답자 직업군별 응답 패턴의 차이가 확연

- 교수, 연구원, 기업인은 ‘검사방법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나 종합검사는 유지해야 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금융인은 ‘현재의 종합검사는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응답률

# 금융감독 정책

---

## ■ 금융감독 정책 관련 이슈

-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및 검사료와 발행분담금으로 마련됨
  - 감독분담금 및 검사료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써, 2022년의 경우 그 규모가 2,871억원으로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3,973억원)의 72.3%를 차지
  - 이는 1999년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1.4%에서 매년 늘어나 23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수치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 금융감독원 운영재원 관련 서베이 문항

[문] 금융감독원은 현재 약 2,1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급여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및 검사료에 의해 충당되고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 ② 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분담금은 유지한다
- ③ 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검사료는 유지한다
- ④ 현 상태를 유지한다

# 금융감독 정책 평가

## ■ 금융감독원 운영재원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가장 다수인 34.7%의 경제전문가가 ‘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분담금은 유지한다’고 응답
- 다음으로는 ‘정부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검사료는 유지한다’(28.0%), ‘전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27.1%) 순으로 답변하였으나, 세 답변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
- 한편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응답은 10.2%를 차지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 분담금 및 검사료 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의 한 축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사안
  - 지난 10년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보상의 지연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분식회계, 금융사기, 정보유출 등 직간접적인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했던 많은 사례들이 존재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도 금융소비자 입장보다는 금융공급자 위주의 감독으로 인해 금융상품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방지를 위한 감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내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예: 6대 판매행위 원칙, 징벌적 과징금, 청약철회권 강화, 조정이탈금지 제도 등)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2010년을 전후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
  -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해온 업무를 이관받은 전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함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내는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
  - 2021년에도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요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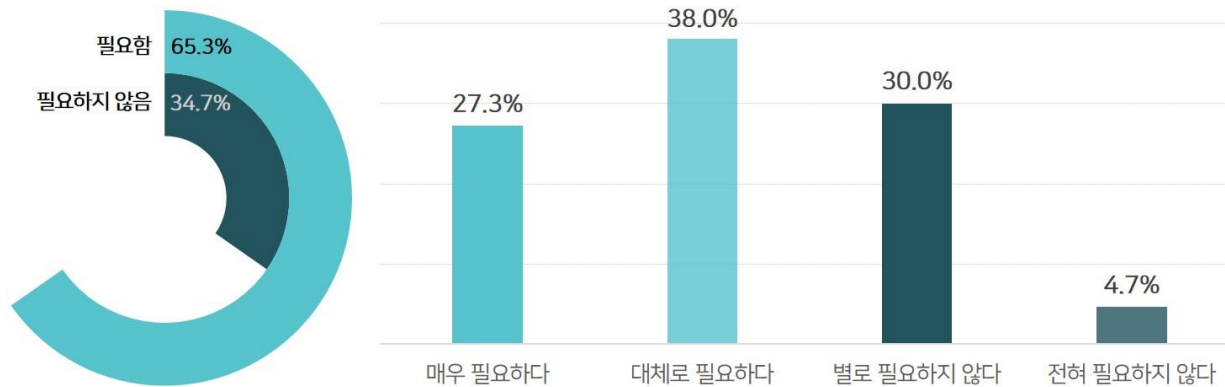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서베이 문항

[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경제전문가의 65.3%(‘매우 필요하다’ 27.3% + ‘대체로 필요하다’ 38.0%)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
  -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4.7%(‘전혀 필요하지 않다’ 4.7% + ‘별로 필요하지 않다’ 30.0%)에 그침
- 동 결과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동의와 그 구체적 정책방안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지지를 반영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 (1) 시의적절한 디지털 금융혁신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 기술 기반의 파격적 변화 등은 기존의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비대면과 디지털, 정보 중심의 서비스로 변모시키고 있음

### (2)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포용성 강화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 (3)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회사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

- 이러한 금융권의 불공정행위 관련 사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를 상실시키는 부정적 효과
-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감독문화 정착 등 강도 높은 정책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금융권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현실

[2016년 이후 금융권의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

일시	주요 사건
2016년	■ DGB 금융지주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 금감원 채용관련 사건(신입직원 채용 비리)
2017년	■ 케이뱅크 인가 관련 사건 ■ 우리은행 채용관련 사건 ■ 하나금융 및 KB국민금융 인사개입 의혹
2018년	■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2019년	■ 해외금이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건 ■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자료: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 (4)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정책과 재정 및 통화 정책 간 연계성 확대

-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축소하여 시장운영에 필요한 판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데 있음
-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해당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건전성 조치 유예 등 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시스템 위험으로의 전이를 차단했던 최근의 정책은 세 정책의 연계성 확보가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추구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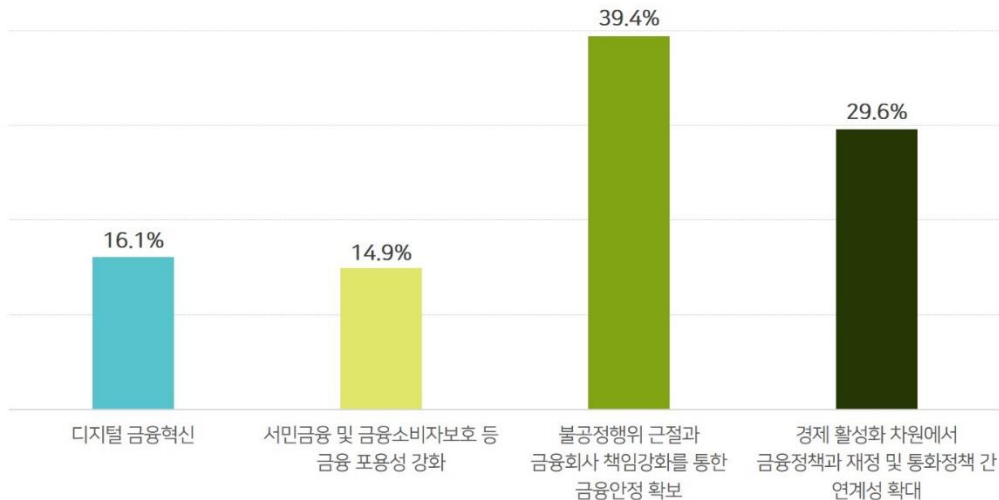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서베이 문항

[문] 현안 당면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디지털 금융혁신
- ②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포용성 강화
- ③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회사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
- ④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정책과 재정 및 통화 정책 간 연계성 확대

# 향후 금융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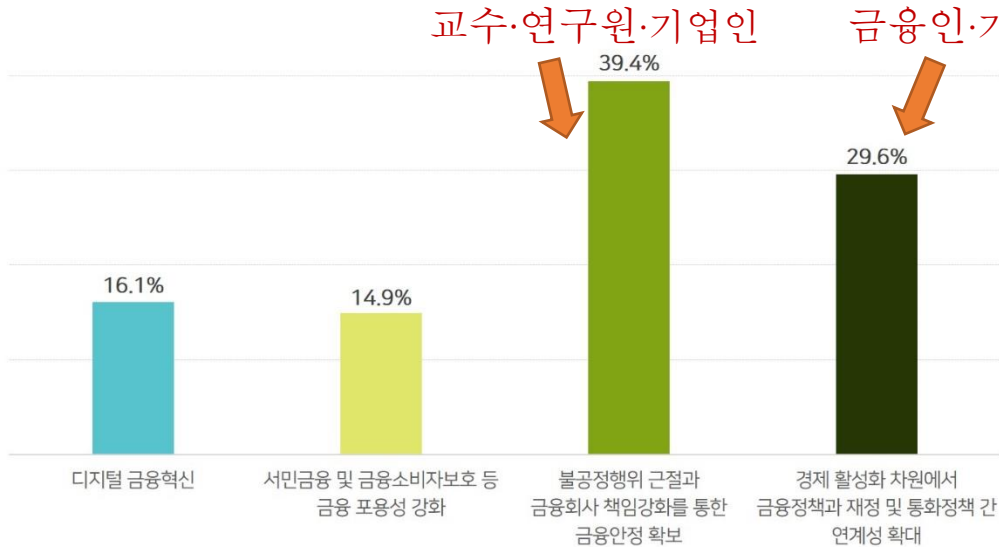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서베이 문항: 결과



- 현안 당면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회사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39.4%)가 꼽힘
-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정책과 재정 및 통화 정책 간 연계성 확대’(29.6%), ‘디지털 금융혁신’(16.1%),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포용성 강화’(14.9%) 순으로 응답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향후 금융정책 관련 현안의 우선순위 서베이 문항: 결과



○ 현안 당면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회사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39.4%)가 꼽힘

-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정책과 재정 및 통화 정책 간 연계성 확대’(29.6%), ‘디지털 금융혁신’(16.1%),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포용성 강화’(14.9%) 순으로 응답

○ 직업군별 응답패턴의 차이가 확연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코로나19 위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후속 효과

### (1) 재정건전성 악화

- 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정부지출과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맞물려 장기적으로 국가부채가 상승

### (2) 구조적 불균형 심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으로 초연결, 초고속, 초지능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 산업이 융합되는 변화가 한창인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발생
- 그 결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비대면 기업/대면 기업 간, IT 산업/비IT 산업 간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양극화의 심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 코로나19 위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후속 효과

### (3)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자국 산업 우선주의 대두

-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후,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왜곡이 심화되는 경향성
-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급망 왜곡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 (4)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최근의 글로벌 물가상승폭 확대에 따라 전세계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으로 가계 부실, 금융기관 충격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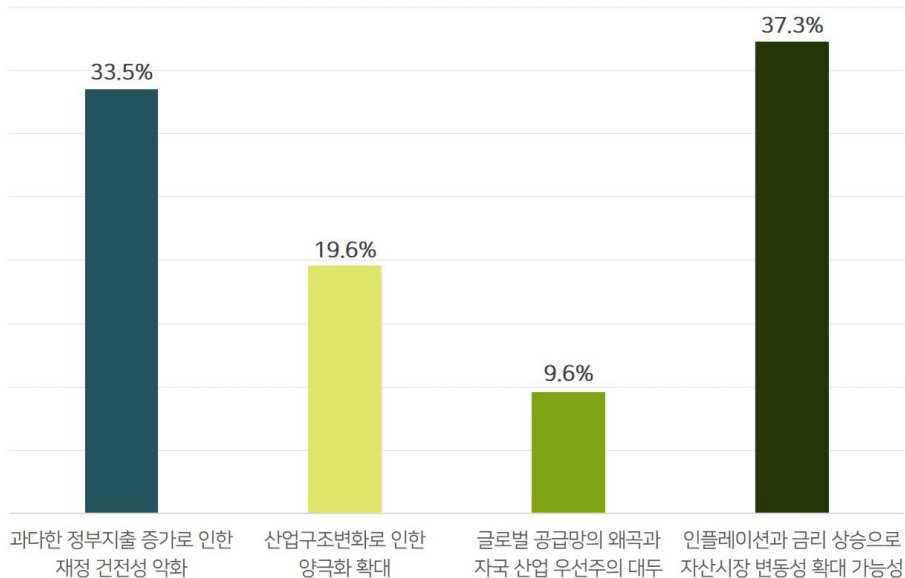
## ■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부정적 후속 효과 관련 서베이 문항

[문]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과도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 ②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양극화 확대
- ③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자국 산업 우선주의 대두
- ④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향후 금융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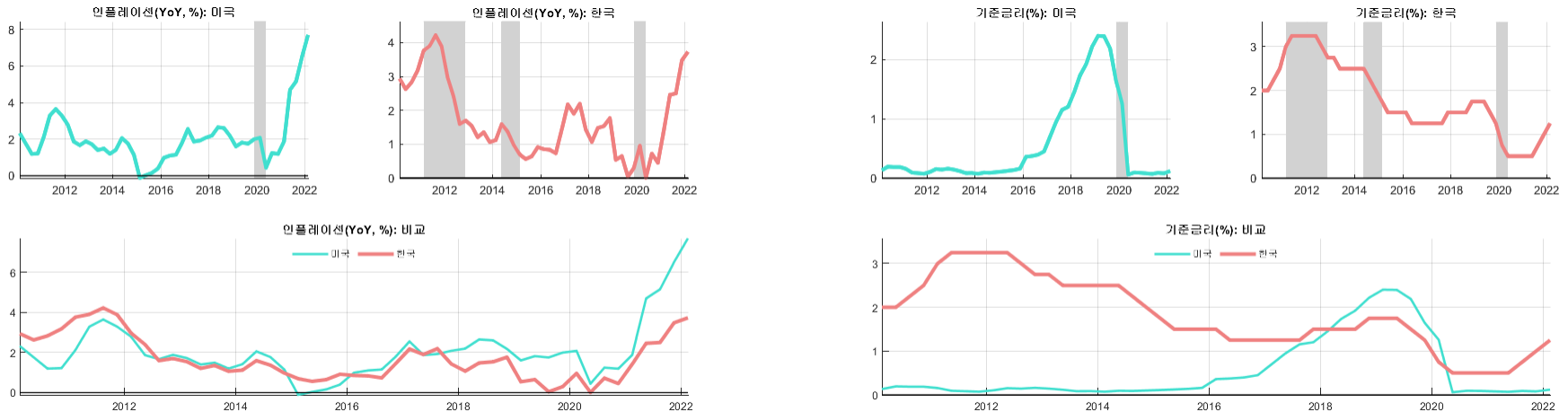
## ■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부정적 후속 효과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37.3%로 가장 심대한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위협요소로 응답됨
  - 다음으로 ‘과다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33.5%로 높았으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양극화 확대’가 19.6%로 조사
- 단기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훼손을 가장 심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

#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부정적 후속 효과 관련 서베이 문항: 결과



○ 설문조사 시점(2022년 2월)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금리 인상 문제가 심각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우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선제적 인식을 보여줌

• 또한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본 설문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